

시론



김 일 태
전남대 석좌교수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6월3일은 지난해 12·3 내란을 응원봉으로 진압하고 ‘빛의 혁명’을 완수한 전자 대한민국 국민 승리의 날이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과 내란 동조 정치인, 국무위원과 행정부 고위관료, 사법부 법관, 검찰을 비롯한 권력 사정기관, 그리고 군대와 민간인 조직에서 범한 내란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다. 우선 새 정부는 내란 특검법으로 내란을 확책하고 동조하고 비호하고 은폐한 세력을 발본색원하여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한국의 극우 세력은 아스팔트에서 성조기와 태극기로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위장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부정 선거 음모론과 사법부 부정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훼손시켜 왔다. 미국도 비슷한 양상이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The Road to Freedom(자유의 길)」 서문에서 “미국의 우파가 애국과 성조기로 자유를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독점”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내란의 진상 규명은 무너진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며 정치적 대립을 극복하는 국민 통합의 밑거름이다.

비상사업의 여파는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한국경제와 지역경제를 망치고 국민의 일상적인 평온한 삶을 파괴했다. 한국경제는

새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과 한국경제 활로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부가 내란 옹호에 열중한 나머지 외교·통상 거버넌스 부재로 환율 상승과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대응할 여력도 없고 감세의 세수 부족과 재정건전성의 재정 긴축으로 수출과 내수가 부진해 올 1분기 성장률 0.2%로 역성장하게 됐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돼 민생과 지방이 붕괴됐다. 서민의 살림살이는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와 고물가로 소비할 여유가 사라졌으며, 상당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은 힘들게 되면서 지방 상가는 물론 수도권 집단 상권마저도 곳곳이 공실로 남치고 있다.

한국경제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부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미·중 간 경제 패권 경쟁으로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첨단산업의 기술 개발과 제조 거점이 일부 국가로 물리게 돼 한국은 미·중 갈등에서 독자적인 첨단 기술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적으로는 저출생과 고령화, 그리고 0%대 저성장 기조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업은 고금리로 투자를 위한 자금 차입이 제한적이고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로 독자적인 투자를 주저하거나 감소시키고 있다. 심지어 여수 석유화학단지마저도 대기업 공장

의 가동 중단으로 가동률 60%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가계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주택이나 내구재 구입 자금의 대출이 어렵고 가처분소득의 여력이 부족하여 소비지출을 감소시키고 있다.

당장 당면한 현안은 망가진 민생을 살리는 내수 진작이고 미국과 관세 협상이다. 정부도 비상경제 TF 회의 가동으로 6월 추경 편성은 재정지출 확대로 내수 진작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7월 패키지 관세 협상은 수출의 활로를 터줄 것이다. 정부지출은 승수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확충, 중하위 소득층의 민생회복지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영업 지원, 관세 피해 수출업종의 지원,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내수를 진작시킬 것이다. 그리고 상위층 이상은 일시적 소득세 감면으로 세금을 환급해 주고 기업은 법인세 감세보다 보조금 지급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2001년 ‘경제성장조세지원 통합법(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에서 시행한 조세 감면 법안처럼 일정 수준의 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이나 세대의 경우 소득 구간별로 차등적 소득 세율을 인하여 세금 환급으로 소비지출을 자극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정부지출과 조세 감면을 조합한 방안으로 시행하면 포퓰리즘에서도 자유스럽고 소비지출 촉진에도 큰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 정책은 동맹국과 주변국 간 안보·외교와 통상의 균형, 경제성장의 동력 확보, 경제적 불평등 해소, 저출생 및 고령화와 지방소멸의 대응일 것이다. 외교와 통상은 강대국의 패권주의 심화에 따른 국제적 공조와 보호무역 대두로 인한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수출라인을 다각화해야 한다. 첨단산업(인공지능, 배터리, 반도체 등)으로 신성장을 확보해 최상위 소득계층과 청년층, 고령층 간 경제적 불평등 확대를 줄이며 성장의 과실을 재분배하는 포용적 자본사회의 모델과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새 정부는 내란을 청산해 민주주의와 자유를 찾고 더불어 함께하는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성장의 새 동력을 확보해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

김영순의 ‘문화터치’



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

광주에 개방형 아레나 공연장 설립이 시급하다. 전 세계적으로 음악축제가 붐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이렇다할 음악 축제가 없다. 더욱이 아이돌들이 전 세계를 종횡무진 누비고 있는데도 정작 우리나라에선 이들의 공연을 수용할 공연장도 페스티벌도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레나 공연장 설립을 대선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려면 적어도 3·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 또한 막대하다. 무려 수천억원, 경우에 따라서는 1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그 사이에 광주에 개방형 아레나 공연장을 설립하여 광주를 세계적인 음악축제도시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야외 음악축제로는 영국의 글래스톤베리(Glastonbury), 벨기에의 투모로우랜드(Tomorrowland), 미국의 코첼라(Coachella) 등이 있다. 이들은 대형 야외 페스티벌로 하나의 국가 브랜드가 된지 오래되었다. 매년 수십만의 관객이 몰려들어 단순한 음악 이벤트를 넘어 지역 경제를 움직이고 도시를 세계에 알리는 힘이 되고 있다. 먼저

G-아레나, 광주 우치공원에 야외 공연장을

글래스톤베리를 보자. 9천여명의 인구를 가진 작은 소도시에서 1970년에 시작된 이 축제를 즐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이 무려 20만명이다. 축제가 열리는 6월, 글래스톤베리는 인산인해를 이룬다. 세계에서 가장 큰 노천에서 벌어지는 이 축제는 음악이 주요 장르인긴 하지만 서커스, 극, 코미디, 춤, 카바레 등 다양한 예술축제 현상으로 변한다.

벨기에의 투모로우랜드도 대단한 축제열기를 내뿜는다. 유럽의 작은 일렉트로닉 뮤직 행사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인이 모여드는 전설적인 페스티벌이 되었다. 미국의 코첼라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근처 코첼라 밸리에서 열리는 종합 음악 페스티벌이다. 화려한 라인업으로 빠르게 북미 최고의 음악 페스티벌로 자리잡은지 오래되었다. 대도시가 아닌 콜로라도 사막 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다소 접근성이 좋지 않다. 그러나 그 점이 장점이기도 하다. 사막이라는 점 때문에 소음 민원 문제에서 매우 자유롭다. 도심의 페스티벌과 달리 새벽까지도 공연이 가능해 뮤직페스티벌로는 안성맞춤이다. 박진감 넘치는 음악의 비트는 물론이고 아름다운 풍경이 보너스로 주어져 코첼라를 찾은 이들에게 눈호강을 시켜주기에 충분하다.

이쯤해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자. K-POP 아이돌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나라를 널리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을 제

대로 수용할 아레나 공연장 하나가 없다. 또한 국내에서 자생적인 글로벌 음악축제 또한 아직 없다. 뮤직 페스티벌은 커녕, 3만명 이상 수용 가능한 공연장 역시 없는 실정이다. 아 이러니하게도 K-POP의 심장부인 대한민국에는 ‘K-POP을 위한 무대’가 없는 것이다. 광주가 지금 나서야 할 이유다. 정식 대형 아레나가 들어서기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개방형 아레나 공연장’을 하루빨리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구조물 위주의 고정 공연장이 아닌, 자연 지형과 무대를 결합한 개방형 구조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수천명, 수만명 규모의 관객 수용이 가능하다. 이미 세계적 축제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성공을 입증하지 않았는가.

최적지는 광주 북구 우치공원이다. 지형과 교통 여건, 시민 접근성이 뛰어나 공연장 입지로 손색이 없다. 더욱이 소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개방형 아레나 공연장은 빠르고 실현 가능한 문화정책이다. G-아레나, 개방형 야외공연장이 광주에 설립되면 K-POP, EDM, 위타밤, 대학연합회축제 등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예술축제를 수용할 수 있다. 문화예술도시 광주의 세계적인 브랜드가 가능하며 경제적 효과까지 부수적으로 거둘 수 있다. 음악도시 광주, 축제도시 광주, 세계로 뻗은 K-POP의 또 다른 중심지 광주, 그 새로운 시작이 바로 광주 우치공원에서 펼쳐지면 좋겠다.

안전습관 실천으로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플러그를 접촉시켜 과부하로 불이 난 경우, 튀김을 위해 식용유가 담긴 냄비 등에 불을 올려놓은 채 주방을 장시간 떠나 발화가 일어난 경우, 난방기구 주변 가연 물질에 착화·발화된 경우 등 다양하다.

이처럼 대부분의 교통사고나 화재는 실천하기 어렵지 않은 안전습관만 지켜졌다면 발생하지 않았다. 운전할 땐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커브길에서는 속도를 평소보다 좀 더

줄여야 한다. 화재 예방을 위해선 외출이나 수면 전 전기·가스·난방·전기기구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가정에서부터 직장까지 안전을 확인하는 습관, 운전 시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운전에만 집중하는 안전 습관을 들이는 세상이 되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 등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될 거로 생각한다.

〈한선근·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説

재원 조달 막막한 ‘전남기록원’ 국비 지원이 해답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기록관을 운영 중인 곳은 서울시와 경남도 뿐이다. 다른 지역도 지방기록관 건립을 위한 국고 보조를 건의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방사무’라며 자체 부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록물 관리 법률에도 반하는 것이다.

전남의 경우는 어떨까.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건립 기본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폐교 이후 20년 이상 방치된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 부지 등 5곳의 도유지를 포함해 이달 내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했다. 그런데 648억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가 부담이다. 서울은 500억원 정도, 경기도는 130억원을 투입했다. 각각 2023년, 2027년 개원을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와 경북도, 조례 제정을 마치고 기본계획 수립 단계인 대구시·강원도, 연구용역을 거쳐 설립을 준비 중인 인천시·전북도 등 8개 자치단체 모두 관건은 재원 확보로 귀결된다.

지방기록관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전남도만

보더라도 도청 내에 600㎡ 규모의 문서고를 운영하고 있으나 종이기록물 기준 16만5천권으로 현재 수용률은 87%에 이른다. 3·4년 후면 포화를 예정하고 있다. 특히 관리기관에 따로 영구 보관해야 할 30년 이상 보존 대상 지정기록물도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 유실 및 훼손 우려가 커 보인다.

지난해 7월 전남도의회에서도 전남기록원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최대한 신속하게 해법을 찾고 건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전국 지자체의 어려움이야 한 두해가 아니다.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영향으로 제정에 빨간불이 들어온지 오래다. 탄탄하지 않은 살림으로는 정말 어렵도 없다.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과 역사 자료의 가치도 무한하다. 국비를 지속 요청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국가 사무로 폭넓게 인정하고 지원하는 게 맞다. 전국적으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긍정 검토해야 한다. 또 결정해야 한다.

화폭에 남겨질 들불야학의 산실 의미있고 보람된 일

광주 서구 광천시민아파트 일원에서 스케치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도시화와 민중화의 기억이 동시에 흐르는 공간이지만 대규모 재개발을 앞두고 대부분이 철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는 붓과 펜으로 기록하기 위해 기획전을 마련했다.

광천시민아파트는 1970년 7월 광주 최초로 조성된 연립형 구조에 3층 짜리 3개 가·나·다동으로 구성됐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에는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가 거주하며 들불야학의 거점으로 쓰였다. 지역 노동자를 위한 학교인 들불야학은 1978년 8월 인근 광천동성당 교리실에서 시작해 다음해 1월 아파트 다동 2층으로 옮겨왔다. 윤 열사는 5월 항쟁의 마지막 날 5월27일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의 총탄을 맞고 순화한다.

역사성과 상징성이 남다르다. 시민아파트는 5천800여 세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지에 포함돼 전면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1개 동을 리모델링, 역사박물관 형태로 보존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이미 1·2년 전부터 이주 절차에 돌입했으며, 184세대의 거주민도 전부 떠난 상황이다. 스케치에 동행한 작가들은 골목 끝 그늘진 담장 아래, 낮은 철문 앞, 아파트가 보이는 작은 굴터 등에 각자 자리를 잡고 각자의 시선으로 하얀 도화지에 담았다. 세월의 흔적까지 고스란히 스며들어 그 날을 증언하는 것처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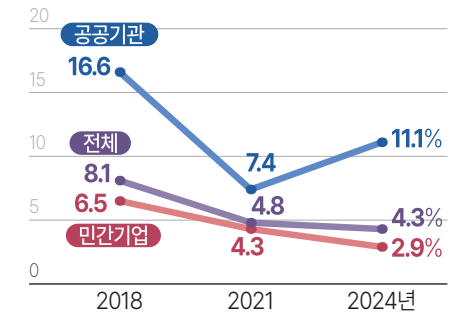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다. ‘들불7열사’를 포함해 많은 활동가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광주시민의 귀중한 자산이다. 일부라도 남아 미래세대가 방문하고 기억할 수 있게 돼 그나마 다행스럽다. 제대로 된 보존과 활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들불열사기념사업회는 영상과 사진 작가들도 초청해 기록하는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모두 완료되면 전시회를 준비해 일반에 공개한다. 들불야학은 화폭에 남겨져 시민들과 계속 호흡하게 된다. 마지막 모습을 마주한 특별한 행사였다. 보람 되고 의미가 있다. 시대의 정신이 깃든 광천시민아파트,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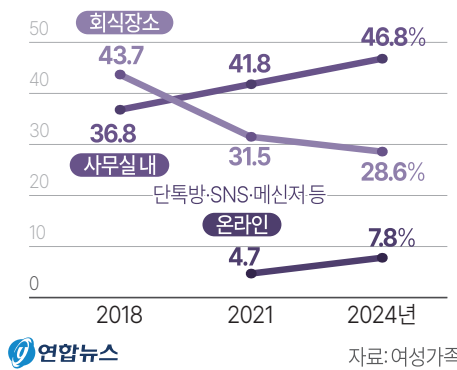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2024년 기준 공공기관·민간업체 직원 및 성희롱 방지 업무 담당자 등 19,023명 조사



성희롱 발생 장소



자료: 여성가족부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烈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650-2016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편집국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1)·(주)·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